



지방 > 전북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후 경영난 겪는 전북지역 지방의료원

다른 병원 이송됐던 환자들 돌아오지 않아 병상 '텅텅'

임승식 전북도의원 "임금체불 될 수도...전북도, 지원책 마련해야"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23-10-11 15:25 송고



11일 임승식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2023.10.11/뉴스1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전북지역 지방의료원이 전담병원 해제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환자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던 환자들 다시 돌아오지 않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간주돼 내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정읍1)은 11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 전담 전북

지방의료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당기순손익이 61억원 흑자였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약 4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남원의료원은 적자규모가 2029년 15억원이었으나 올해 7월 기준 89억원으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코로나19 이전 병상가동률이 85% 이상이던 군산의료원은 현재 35%만 가동 중이며, 남원의료원 역시 80%대에서 40%대로 떨어졌다.

타 지자체에도 이 같은 문제는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손실보전금으로 80억원을 집행했고 부산시와 대구시, 경기도, 제주도 등도 이들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임 의원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행정명령에 따라 전체 환자들을 이송시킨 후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만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정상운영에 돌입했으나 심각한 경영난으로 존립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의 손실보상금으로 어느 정도 버텼으나 이마저도 올해 4월 중단되면서 임금체불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이 2019년 이전 실적을 회복하는데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까지는 손실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방의료원이 도산 위기에 빠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취약계층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료원들이 안정을 되찾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감]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경영 한계...대구·김천 100억 이상 손실 증가

이우호 기자 uho@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10-11 18:03:40 수정 2023-10-11 18:03:35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지 후 올해 상반기까지 2939억 적자 예상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대병원에 의료공공성 강화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노조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이 경영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경북 김천은 2019년 대비 100억원대 이상으로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대응 이후 35개 공공병원(지방의료원) 경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35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 결산상 당기순이익의 총계가 약 292억7천만원 흑자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해지된 뒤 약 6개월가량 지난 2023년 상반기(1~6월)까지의 경영실적을 기초로 2023년 경영실적을 추산했을때 약 2천938억6천만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9년 대비 약 3천23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관당 평균 약 92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관마다의 경영실적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9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기관은 서울, 천안, 제주의료원 3곳뿐이었다.

나머지 32개 의료기관은 모두 2019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기관으로 2019년 대비 100억원대 이상으로 손실이 증가한 기관은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안성, 파주, 포천, 성남, 청주, 충주, 남원, 김천, 마산, 서귀포 등 15곳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경영악화의 원인에는 의료수익의 폭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2023년 입원수익은 5천467억5천만원으로 2019년 입원수익 7천185억9천만원에 비해 1천718억4천만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수익도 2023년 3천917억2천만원으로 2019년 (4천246억5천만원) 대비 329억3천만원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약 1천437억5천만원에 이르던 의료손실도 2023년에는 -5천426억2천만원까지 늘어, 2019년 대비 약 3천988억7천만원가량의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손실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에 훼손으로 전담병원 해지 이후에도 환자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원환자가 급감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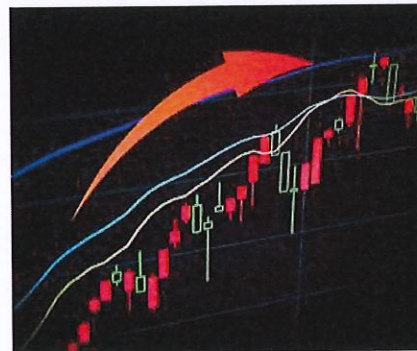
실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에 내원한 연인원환자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담병원 해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이전 시기였던 2019년에 비해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지방의료원 재정 상태를 고려한 회복기 지원 기간 연장과 함께 2019년 수준으로 경영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보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기정보

AD

복권 48억 터진다! 1089회 "이번호" 무조건 찍어라!
 복권 48억 터진다! 1089회 "이번호" 필수로 찍어라!
 척추통증, 단기간 한 번에 해결 가능해.. "치료법 개발"
 로또조작 들통나...1089회차 당첨번호 6자리 "오늘만" 무료...
 2023년 물어두면 "큰돈" 되는 코인 찾았다! 바로 확인하세...
 로또 1등되려면 3가지 무조건 기억해라!



23. 10. 12. 오전 7:55

[국감]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경영 한계...대구·김천 100억 이상 손실 증가 - 매일신문

석주중앙, 단기간 안 뵈에 애설 가능해.. 시도립 개편

로또조작 들통나...1089회차 당첨번호 6자리 "오늘만" 무료...

2023년 물어두면 "큰돈" 되는 코인 찾았다! 바로 확인하세...

로또 1등되려면 3가지 무조건 기억해라!



복지부, '코로나 적자 지방의료원' 지원확대 검토

✎ 이승덕 기자 | ⓒ 승인 2023.10.11 22:58

“회복기간 늘릴 수 없지만, 어려운 의료원 지원 재정당국과 협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코로나 이후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방의료원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응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에 굉장히 큰 희생과 헌신을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을 보면 현재 46.4%로, 2019년 80.5%에서 절반이 줄어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2%p 정도가 감소했는데 결국 이것은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고 올해 6월에 남원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곳이 모두 적자였다”며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서 의사, 간호사들이 많이 퇴사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방으로 온 35곳 중에서 의사 정원을 충족한 병원은 16곳 반에 불과하고, 간호사 정원을 채운 것은 4곳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에서 어렵게 지방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들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진다는 것.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비상 운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 회복기 손실보상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갖고 이제 회복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병원에 따라, 지역에 따라 회복률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에 “전반적으로 회복 기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특히 어려운 의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